

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부연구위원
(sunhyunglee@kiep.go.kr, Tel: 044-414-1070)

박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위원
(nypark@kiep.go.kr, Tel: 044-414-1245)



차 례

1. 주요 현황 및 갈등 배경
2. 호주·중국 갈등의 경제적 영향
3.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0년 4월 호주가 중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한 이후, 중국이 5월 일부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을 시작으로 보리·석탄·와인·구리 등 수입 제재를 확대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중국이 대호주 수입 제재 품목을 확대하자 호주는 중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통상마찰로 커지고 있음.
 - 통상을 둘러싼 양국 갈등은 중국이 자국민에게 호주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하는 등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 최근 호주·중국 간 갈등 이후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품목의 대중국 수출액이 감소했으나,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주산 철광석 의존도가 높은 중국에 호주와의 마찰은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옴.
 - 2020년 5월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소고기와 보리의 5~10월 대중국 수출액 및 비중이 모두 감소함.
 - 중국정부가 6월에 자국민의 호주 방문 자제를 권고한 이후, 5~10월 호주 내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1%p 감소하여 26.2%를 기록함.
 - 철광석 가격은 4월 말 기준 톤당 83.5미달러에서 12월 18일 기준 161.5미달러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함.
- ▶ 호주를 상대로 한 중국의 전방위적 조치는 중국에 맞서는 국가를 향한 경고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어 양국간 갈등 관계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한편, 갈등의 국제화로 번질 가능성도 있음.
 - 중국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호주는 최근 '공급망 복원 구상(SCRI)'이라는 협력체를 만들어 일본·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 주요국과 공급망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소속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이번 호주·중국 갈등과 관련하여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2020년 6월에 설립된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는 호주를 비롯한 19개국이 중국과의 갈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안보·경제 협력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1. 주요 현황 및 갈등 배경

가. 주요 현황

■ 2020년 4월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촉구한 이후, 중국이 5월 호주산 소고기 일부에 대한 수입 중단을 시작으로 보리·석탄·와인·구리 등 수입 제재를 확대하며 양국간 통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 코로나19 발원지를 두고 미·중 간 논쟁이 커지는 상황에, 4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가 미국을 옹호하며 중국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객관적 조사를 촉구함.
- 이에 중국정부는 5월 12일부터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일부 중단하고, 19일부터는 호주산 보리에 80.5%의 관세(반덤핑 73.6%, 반보조금 6.9%)를 부과하며 대응함.
 - 중국 외교부는 5월 11일 호주 육류가공업체 4곳이 그동안 라벨링 및 위생증명서 관련 검역검사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힘.
 - 5월 18일 중국 상무부는 2018년부터 실시한 조사에서 호주의 보리 덤핑으로 국내 관련 업계가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어 19일부터 수입되는 호주산 보리에 5년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10월 16일에는 비공식적으로 중국정부가 자국 방적공장에 호주산 면화 사용 자제를 지시하고, 11월 6일에는 호주산 석탄, 보리, 목재, 랩스터, 와인, 구리, 설탕 수입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짐.
- 11월 27일 중국정부는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관세(107.1~212.1%) 부과를 발표하였으며, 12월 10일에는 임시 상계관세(6.3~6.4%)를 추가 부과한다고 밝히며 호주산 와인 수입 제재를 공식화함.
- 12월 호주정부는 중국의 호주산 보리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WTO 제소 추진을 공식 발표함.
- 다만 중국은 대체 불가능한 호주산 철광석에 대해서는 아직 수입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문제로 시작된 양국 갈등은 통상을 넘어 외교·안보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임(표 1 참고).

- 중국이 5월 호주산 소고기 수입 금지 및 보리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호주 내 코로나19와 관련한 인종 차별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중국정부는 자국민에게 6월 호주 방문 자제를 권고하면서 여행·유학을 제한함.
- 이후 6~9월에 걸쳐 양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자와 학자를 대상으로 각각 압수수색 및 입국 금지 등 맞불조치를 내놓으며 양국간 외교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음.
- 11월 18일 주호주 중국대사관은 호주정부의 14가지 반중정책을 공개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함.
 - 호주의 주요 반중정책에는 △ 화웨이 5G 장비 사용 금지 △ 「외국인 내정간섭 금지법」 발효 △ 미국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촉구 동조 △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반박 △ 신장위구르 인권에 관한 중국정부 비난 △ 주정부·외국 간 맺은 협정에 대해 연방정부에 거부권 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음.¹⁾
- 11월 30일에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호주 군인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학살을 비난하는 내용의 합성사진을 트위터에 게재하여 호주정부가 크게 반발함.

1) "China shows official list of reasons for anger with Australia"(2020. 11. 18), 9News, <https://www.9news.com.au/national/china-australia-tensions-beijing-government-grievance-list-with-canberra/adc10554-e4e9-4a19-970e-81949501a1ad>(검색일: 2020. 12. 17).

표 1. 최근 호주·중국 갈등 관련 주요 일지

날짜	주요 내용	
	통상	외교
4월 21일		호주, 미국·독일·프랑스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촉구
5월 11일	중국, 호주 육류가공업체 4곳 대상 소고기 수입 금지 발표	
5월 18일	중국, 호주산 보리에 반덤핑 관세(80.5%) 부과 발표	
6월 6일		중국, 호주 내 코로나19 관련 인종차별 증가 이유로 호주 방문 자제 권고
6월 26일		호주 정보당국, 「외국인 내정간섭 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관영매체 기자 4명 자택 압수수색
7월 23일		호주, UN에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선언문 제출
8월 18일	중국,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착수	
8월 31일	중국, 호주산 와인에 대한 정부 보조금 조사 착수	중국,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중국계 호주인 앵커 구금 발표
9월 7일		중국 상주 호주 언론인 2명, 중국계 호주인 앵커 사건 연루로 역류 위기 속 호주 귀국
9월 9일		호주, 안보문제로 중국인 교수 2인 비자 박탈
9월 24일		중국, 반중 호주 학자 2인 입국 금지
10월 16일	중국, 자국 방적공장에 호주산 면화 사용 자제 지시(비공식적)	
11월 6일	중국, 호주산 석탄, 보리, 목재, 랩스터, 와인, 구리, 설탕 수입 제한(비공식적)	
11월 18일		주호주 중국대사관, 호주 언론사에 호주의 14가지 반중정책 공개하며 철회 요구
11월 19일		호주와 주요 선진국,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우려하는 공동성명 발표
11월 27일	중국,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관세(107.1~212.1%) 부과 발표	
11월 3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트위터에 호주 군인의 민간인 학살 의혹 합성사진 게재
12월 8일		호주, 주정부·외국 간 맺은 협정에 대해 연방정부에 거부권 부여
12월 9일		호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
12월 10일	중국, 호주산 와인에 상계관세(6.3~6.4%) 부과 발표	
12월 14일	중국 『환구시보』, 호주 석탄을 제외한 석탄 수입 통관 절차 면제 보도	
12월 16일	호주, 중국의 호주산 보리 반덤핑 관세 부과에 WTO 제소 추진 공식 발표	

자료: 각종 언론기사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나. 갈등 배경

- 호주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으로써 양국간 갈등이 촉발됨.
 - 호주·중국 갈등은 호주가 지난 4월 미국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요구에 동조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나, 호주정부의 대중 견제 행보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어왔음.
 - 중국이 호주의 14가지 주요 반중정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한 사례와 같이 자국을 겨냥한 호주의 정책에 전세계 반발하며 호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자,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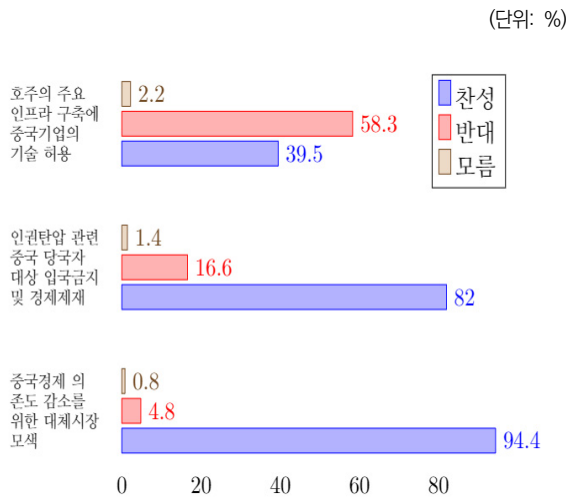
- [외부 요인] 호주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미국 등 전통적 안보 동맹국인 서방 국가와 동조하며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
 - 호주정부는 △ 2018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화웨이 5G 장비 사용 금지 △ 2020년 4월 미국·독일·프랑스와 더불어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촉구 △ 11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우려하는 공동성명 발표 △ 홍콩인 비자 연장 확대 △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 동맹국과 연대하며 반중국적 의견을 피력해옴.
 - 호주는 서방 국가와의 동조뿐만 아니라 미국·인도·일본과 함께 이른바 쿼드(Quad)²⁾ 협력체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상황에 관심을 두는 한편, 중국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해옴.
 - 쿼드 4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및 남중국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해오고 있음.

- [내부 요인] 호주 내에서 경제·사회적으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호주정부는 관련 정책을 잇달아 추진해오고 있음.
 - 호주정부는 중국을 겨냥하여 △ 2019년 「외국인의 내정간섭 금지법(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발효 △ 2020년 12월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강화 △ 주정부·외국 간 맺은 협정에 대해 연방정부에 거부권 부여 등의 정책을 연이어 추진해오고 있음.
 - 호주 정치권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로 2019년 외국인의 내정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됨.
 - 호주 내 중국의 기업 인수와 투자가 급증하자 호주정부가 국익 강화 및 산업 보호 명분으로 중국의 주요 호주기업 매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2020년 12월 외국인투자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함.
 - 12월 8일 호주의회는 주정부가 인프라, 통상, 관광, 문화, 대학교 연구 등과 관련하여 외국 정부와 맺은 협약을 연방정부가 최종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호주 내 중국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2) 쿼드(Quad)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약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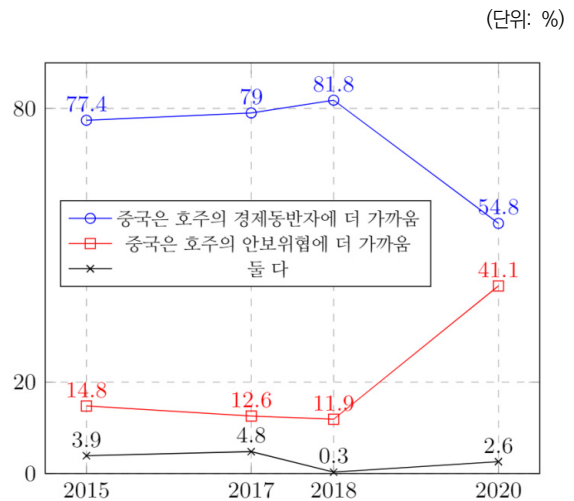
- [반중정서] 최근 호주사회에서 중국이 ‘경제동반자’라는 인식이 급감한 반면 ‘안보위협국’이라는 인식이 급증하고 있으며, 호주국민은 호주정부의 중국 견제용 정책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20년 6월 24일 발표된 호주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국민의 94.4%가 호주정부의 ‘중국경제 의존도 감소를 위한 대체시장 모색’ 관련 정책에 찬성한다고 밝힘(그림 1 참고).
 - 호주정부의 ‘인권탄압 관련 중국 당국자 입국 금지 및 경제제재’ 정책에 관하여서는 호주국민의 82%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호주의 주요 인프라 구축에 중국기업의 기술 허용’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호주국민의 58.3%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들어 호주국민의 반중정서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고).
- 2015년 77.4%, 2017년 79.0%, 2018년 81.8%의 호주국민은 중국이 ‘경제동반자에 더 가깝다’고 답하는 등 대중 정서가 호의적인 추세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그 추세가 꺾임.
- 2020년 호주국민의 54.8%가 중국이 호주의 경제동반자에 더 가깝다고 답변했으며, 41.1%는 중국이 호주의 안보위협에 더 가깝다고 답변하면서 최근 호주사회 내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호주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호주국민의 찬반 여론조사



주: 호주 성인 2,448명 대상 2020. 3. 16-3. 29 여론조사.
자료: 로위연구소 Poll 2020 자료(검색일: 2020. 12. 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중국: 호주의 경제동반자인가 아니면 안보위협국인가?



주: 해당 질문은 매년 설문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2015년, 2017년, 2018년, 2020년에만 포함됨.
자료: 로위연구소 Poll 2020 자료(검색일: 2020. 12. 17)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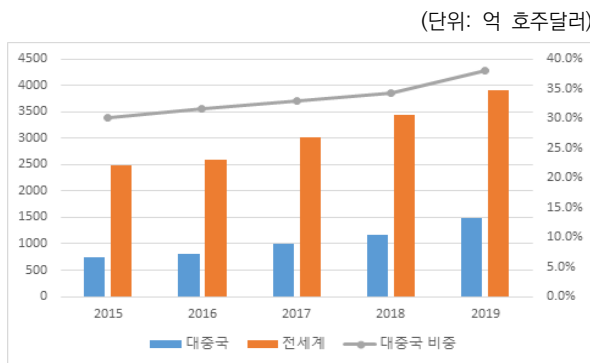
2. 호주·중국 갈등의 경제적 영향

가. 호주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 [수출] 최근 호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수출 품목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호주의 전체 수출액(약 3,900억 호주달러)³⁾ 중 대중국 수출액은 약 1,500억 호주달러로 38.1%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부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철광석은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2.2%에 달하며,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대중국 10대 수출 품목에는 중국의 수입 제재 대상 품목 세 가지(석탄, 소고기, 구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대중국 수출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비공식적 수입 제재 대상 품목 중 하나로, 대중국 수출 규모 23위인 목재의 경우 2019년 비중이 94.3%에 달함.
- 11~12월에 걸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호주산 와인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2019/20년 회계연도 기준 호주의 전체 와인 수출액(28억 호주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임.⁴⁾

그림 3. 호주의 대중국 수출 추이(2015~19년)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0. 12. 29).

표 2. 중국의 대호주 주요 수입 제재 품목(2019년)

(단위: 십억 호주달러, %)

순위	SITC	금액	대중 수출 비중	
3	321	석탄	13.7	21.4
6	011	소고기	2.7	24.7
8	283	구리	2.3	35.0
17	263	면	1.1	71.1
23	247	목재	0.6	94.3
24	043	보리	0.6	56.7

주: 순위는 수출액 기준임.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검색일: 2020. 12. 11).

■ [투자] 2019년 중국은 호주의 외국인투자 10대 국가 중 하나로, 2013년 중국의 대호주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2017년 급감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⁵⁾

- 중국의 대호주 투자(누적)는 2016년 850억 호주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7년 640억 호주달러로 24.7% 감소했으나,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6%, 14.6% 증가함.
- 2019년 호주의 외국인투자액(누적) 총 3조 8,445억 호주달러 중 중국의 투자액은 전년대비 14.6% 증가

3) 호주달러당 환율은 853원임(2020년 12월 23일 기준).

4) Wine Australia, "Australian wine sector at a glance." (Aug. 2020)

5) 호주 통계청은 외국인투자액을 stock 기준으로 발표해오고 있음.

한 약 782억 호주달러로 전체의 2%(9위)를 차지함.

- 2019년 홍콩은 대호주 5대 투자국으로, 홍콩을 통한 중국의 해외투자 전략을 고려할 때 중국의 실질 투자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됨.⁶⁾

표 3. 주요국의 대호주 투자 현황(2019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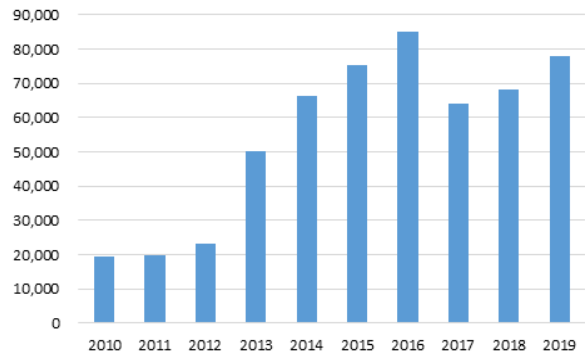
(단위: 십억 호주달러, %)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1	미국	984	25.6	3.6
2	영국	686	17.8	17.5
3	벨기에	348	9.1	10.4
4	일본	241	6.3	3.1
5	홍콩	141	3.7	14.5
6	싱가포르	100	2.6	11.2
7	네덜란드	87	2.3	3.0
8	룩셈부르크	86	2.2	9.6
9	중국	78	2.0	14.6

주: 호주 통계청은 외국인투자액을 stock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음.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0. 12. 17).

그림 4. 중국의 대호주 투자 추이(2010~19년, 누적)

(단위: 백만 호주달러)



주: 호주 통계청은 외국인투자액을 stock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음.
자료: 호주 통계청(검색일: 2020. 12. 17).

■ [유학생] 호주는 중국인이 선호하는 유학지 중 하나로, 최근 4년간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냄.

- 2020년 1~10월 호주의 전체 외국인 입학생 약 86만 명 중 중국인은 약 23만 명으로, 26.3%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함.
- 2018년 중국인 유학생이 약 26만 명으로 전체의 29.2%까지 차지하였으나, 2019년 27.3%로 비중이 소폭 감소함.

표 4. 호주의 주요 외국인 유학생 규모 (2020년 1~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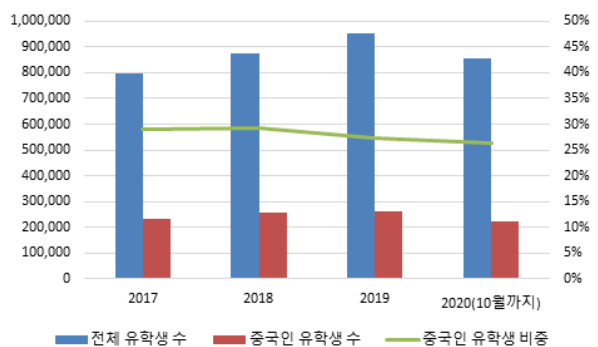
(단위: 명, %)

순위	국가	규모	비중
1	중국	225,297	26.3%
2	인도	142,775	16.7%
3	네팔	68,816	8.0%
4	브라질	32,423	3.8%
5	콜롬비아	31,303	3.7%
6	베트남	29,006	3.4%
7	말레이시아	24,834	2.9%
8	필리핀	24,001	2.8%
9	한국	23,617	2.8%
10	인도네시아	21,643	2.5%

주: 입학 기준임.
자료: 호주 교육부(검색일: 2020. 12. 17).

그림 5. 호주의 중국인 유학생 규모(2017~20년)

(단위: 명)



주: 입학 기준이며, 2020년은 1~10월 통계자료임.
자료: 호주 교육부(검색일: 2020. 12. 17).

6) 오탉현, 윤지현, 박나연(2020),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5, p. 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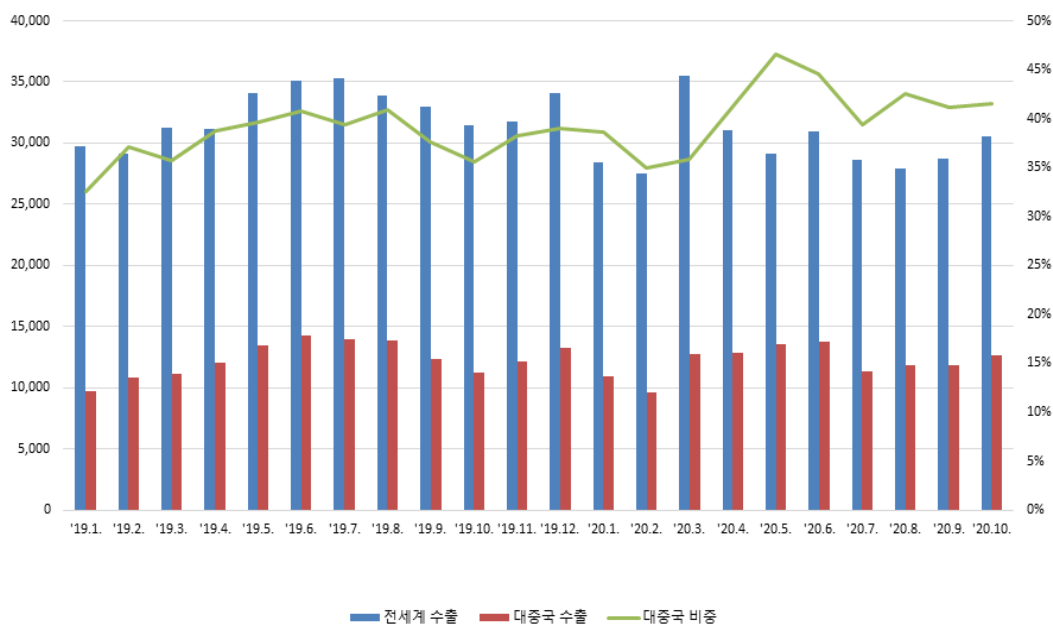
나. 호주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수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20년 1~10월 호주의 전 세계 누적 수출액은 대폭 감소했지만, 대중국 누적 수출액은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함.

- 2020년 1~10월 호주의 전 세계 누적 수출액은 약 3,000억 호주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감소한 한편, 대중국 누적 수출액은 약 1,200억 호주달러로 1.3% 감소에 그침.
- 같은 기간 대중국 누적 수출액 비중은 40.6%로 전년동기 37.9%보다 소폭 증가함.
 - 대중국 최대 수출 품목인 철광석의 2020년 1~10월 대중국 누적 수출액은 약 757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16% 증가하였음.
 - 중국정부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일부 금지하고 보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시점인 2020년 5월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46.6%로 최근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 이후 2020년 7월에는 대중국 비중이 39.4%까지 낮아졌으나, 10월에 41.6%로 다시 반등하면서 전년동월대비 5.9%p 높은 수치를 나타냄.
- 한편 호주 통계청이 12월 23일에 발표한 11월 수출액 예측치에 의하면, 대중국 수출액이 약 114억 호주달러로 전월대비 -9.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대중국 비중은 10월 41.6%에서 11월 37.3%로 줄어들어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그림 6. 호주의 전 세계 및 대중국 수출 추이(2019~20년 10월)

(단위: 백만 호주달러(좌),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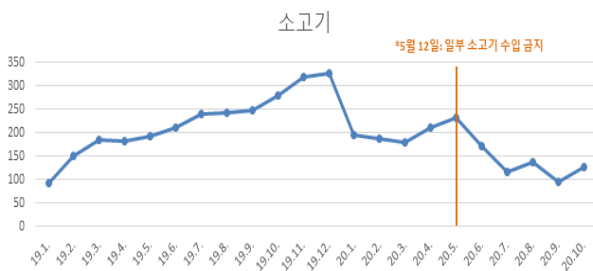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검색일: 2020. 12. 11).

■ [수입 제재 품목의 수출] 2020년 5월 중국이 수입 제재를 가한 소고기와 보리의 2020년 5~10월 대중국 수출액 및 비중이 모두 감소함.⁷⁾

- [소고기] 2019년 12월 호주의 대중국 소고기 수출액이 약 3억 2,600만 호주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2020년 5~10월 누적 수출액은 약 8억 8,300만 호주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6% 감소함.
-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20년 5~10월 18%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25%에서 7%p 감소함.
- [보리] 호주의 대중국 보리 수출액은 2020년 4월 약 1억 7,900만 호주달러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5월 19일 중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시점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20년 5~10월 누적 수출액은 약 1억 3,800만 호주달러로 전년동기 1억 5,700만 호주달러 대비 12.1% 감소함.
- 보리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9년 5~10월 37%에서 2020년 5~10월 35%로 소폭 감소함.

그림 7. 호주의 대중국 소고기 수출 추이
(2019~20년 10월)

(단위: 백만 호주달러)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검색일: 2020. 12. 11).

그림 8. 호주의 대중국 보리 수출 추이
(2019~20년 10월)

(단위: 백만 호주달러)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검색일: 2020. 12. 11).

■ [유학생] 6월에 중국정부가 자국민에게 호주 여행 및 유학 자제를 권고한 이후에는 오히려 중국인 유학생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 2020년 5~10월 중국인 유학생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8%p 증가하여 27.1%를 기록함.

다. 호주산 광물자원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은 단기간 내에 호주산 석탄 및 철광석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으므로 호주와의 무역전쟁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음.

- 중국정부는 호주산 석탄에 대하여 수입 금지조치를 취했지만, 대체할 제품을 찾기 힘든 호주산 철광석에 대해서 아직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음.

7) 단, 대중국 수출액 및 비중 감소에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음.

■ [석탄] 최근 후난성과 저장성을 포함한 중국 남부 주요 도시의 전력난 원인이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⁸⁾

■ [철광석] 중국의 철광석 총수입량 중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며, 최근 호주·중국 갈등 등의 영향으로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의존도] 2019년 기준 중국의 철광석 총수입량은 약 10억 7,000만 톤이며, 이 중 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62.2%로, 브라질(21.3%)의 약 3배를 차지함(표 5 참고).

○ 호주의 유일한 대체국가라 여겨지는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 광산 댐 붕괴사고 등의 여파로 철광석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중국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⁹⁾

- 반대로 2019년 기준 호주산 철광석의 82% 이상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음(표 6 참고).

표 5. 2019년 중국 철광석 수입국별 비중
(단위: %)

국가	비중
호주	62.2
브라질	21.3
기타	16.5
합계	100

주: 2019년 중국의 철광석 총수입량은 10.7억 톤임.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자료(검색일: 2020. 12. 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6. 2019년 호주산 철광석의 수출국별 비중
(단위: %)

국가	비중
중국	82.2
기타	17.8
합계	100

주: 2019년 호주의 철광석 총수출량은 8.4억 톤임.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검색일: 2020. 12. 19).

- [가격 급등] 호주·중국 갈등이 시작된 4월 이후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톤당 83.5미달러(4월 30일 기준)에서 161.5미달러(12월 18일 기준)로 6개월 동안 두 배 가까이 상승함(그림 9 참고).

- [원인] 호주·중국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호주산 소고기, 보리, 석탄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자 철광석도 제재 품목에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중국의 철광석 수입업체 등이 호주산 철광석 사재기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됨.

○ 그 외 △ 지난해 브라질 광산 댐 붕괴로 인한 공급 부족 △ 최근 호주 광산지역 폭우로 인한 공급 부족 △ 호주의 금리인하 정책 등의 이유가 거론되고 있음.

- [세수 확보] 철광석 가격 급등 등의 이유로 중국의 호주산 철광석 수입액이 54억 6,700만 미달러(4월)에서 72억 6,600만 미달러(10월)로 증가함(그림 10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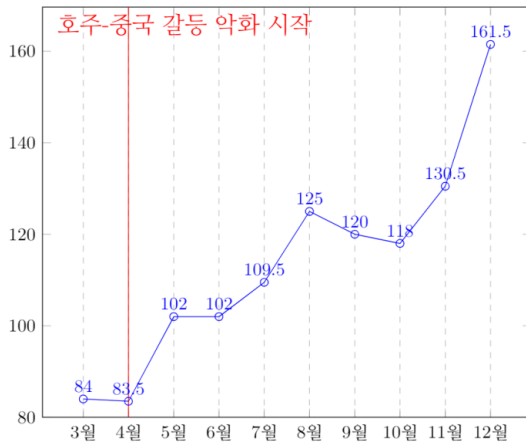
○ 호주 광산업계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호주정부의 세수 확보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임.

8) "China's power supply is struggling as winter temperatures plunge. Is the ban on Australian coal to blame?,"(12. 18), <https://www.abc.net.au/news/2020-12-18/china-electricity-power-shortage-hunan-zhejiang-australia-coal/12993418>(검색일: 2020. 12. 19).

9) 「브라질 발리, 댐 붕괴 여파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업체서 밀려나」, 『연합뉴스』(2020. 2. 22),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2003000094>(검색일: 2020. 12. 18).

그림 9. 호주·중국 갈등 악화 이후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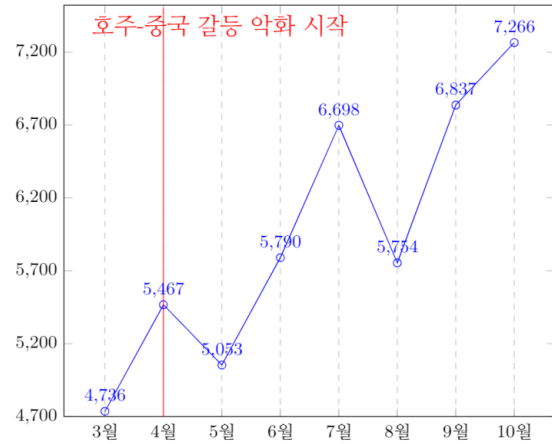
(단위: 미달러)



주: 1) 단위는 톤(t)당 2020년 월말 철광석 선물 계약 가격으로, 12월의 경우 12월 18일 기준임.
2) 호주·중국 갈등 악화 시점 기준일은 2020년 4월 21일임.
자료: Trading Economics(철광석) 자료(검색일: 2020. 12. 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0. 호주·중국 갈등 악화 이후
중국의 대호주 철광석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미달러)



주: 호주·중국 갈등 악화 시점 기준일은 2020년 4월 21일임.
자료: 중국 GACC 자료(검색일: 2020. 12. 19)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호주의 대응방안

■ 호주는 다양한 반중 협력체의 회원국으로서, 국제협력을 통한 대중국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음.

■ [파이브 아이즈]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각국은 'UK-USA 안보협정'을 체결하여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호주·중국 갈등 관련 중국의 대호주 수입 제재에 대한 공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표 7 참고).

-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공동으로 보복성 제재를 취하거나, 호주를 제외한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이번 중국의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된 호주산 제품을 대신 수입하는 등 호주를 지지하는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는 미국·영국·호주 등 서방 19개국 의원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 6월에 결성한 단체로, 이번 호주·중국 갈등과 관련하여 호주에 대한 지지 태도를 보임.

- 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대해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자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는 '호주 와인 마시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

- [공급망 복원 구상] ‘공급망 복원 구상(SCRI: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은 일본·인도·호주 3개국 이 중국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상호 공급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결성한 협력체로, 쿼드(Quad) 협력체와 유사한 성격임.
- 호주는 중국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일본·인도뿐만 아니라 아세안 주요국과의 공급망 강화를 모색하고 있음.

표 7. 호주의 주요 반중 연합체 가입 현황

연합체	회원국	목적	호·중 갈등 관련 대응
파이브 아이즈 (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안보 관련 기밀정보 공유	- 호주 외 회원국이 수입 제재 품목으로 지정한 호 주산 제품을 대신 수입하 기로 함. - 중국에 대한 공동 보복 조치 검토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 (IPAC)	총 19개국: - 유럽: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 리투아니아 - 북미: 미국, 캐나다 - 아시아·태평양: 호주, 뉴질랜드, 일본 - 아프리카: 우간다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 전략 모색	호주산 와인 소비 촉진 캠페인
공급망 복원 구상 (SCRI)	일본·인도·호주	상호 공급망 강화 및 중국 의존도 축소	

주: IPAC는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의 약자임. SCRI는 Supply Chain Resilience Initiative의 약자이며, Quad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의 약자임.

3. 시사점

- [갈등의 단기적 효과]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수입을 제한한 호주산 제품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으나,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철광석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번 갈등이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 보복조치의 한계점] 철광석 가격 급등 현상은 중국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복병으로, 중국 보복 제재조치의 한계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임.
- [갈등의 장기화 가능성] 최근 호주를 상대로 한 중국의 전방위적 조치는 중국에 맞서는 캐나다, EU 등 다른 국가에 대한 경고성 대응이라는 평가도 있으므로,¹⁰⁾ 호주산 제품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 등 갈등 관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은 호주산 양모, 꿀, 과일, 유제품, 의약품 등으로 수입 제한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음.¹¹⁾

10) "Is China using its clash with Australia as a warning to the world?"(2020. 12. 5),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week-asia/politics/article/3112568/china-using-its-clash-australia-warning-world>(검색일: 2020. 12. 16).

- 2019년 기준 각 품목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양모 76%, 꿀(설탕 포함) 11%, 과일(견과류 포함) 40%, 유제품 39%, 의약품 46%임.
- 다만 중국은 호주산 철광석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마땅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철광석을 제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갈등의 국제화] 중국의 경고 메시지와 보복조치가 거세지면서, 호주와 같이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나라들과 중국의 관계는 양자 갈등을 넘어 다자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2020년 6월 호주를 비롯한 19개국은 '대중국 의회간 연합체(IPAC)'라는 안보·경제 협력체를 설립하여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체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KIEP

11) "Australian honey, fruit, dairy and vitamin producers on 'high alert' over China tariffs threat, report says"(2020. 12. 18), ABC, <https://www.abc.net.au/news/2020-12-08/china-australia-tariffs-honey-fruit-and-dairy-and-vitamins/12960682>(검색일 2020. 12. 16).